

배포일시	2022년 9월 13일(화)
보도일시	즉시

## &lt;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gt;

## 위기에 필요한 사각지대 발굴, 긴급한 혁신이 필요하다

— 수원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 의원)은 9월 13일(화) “위기에 필요한 사각지대 발굴, 긴급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라는 제목으로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8월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연립주택에 세 들어 살던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 윤기찬 연구위원은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은 현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급여 제공방식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찬 연구위원은 “현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식은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거나 자살자 또는 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13개 기관 34종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예측모형을 통해 발굴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발굴된 대상자를 지자체에 배포하여 위험가구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 보고서는 “현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생계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별적 발굴방식으로 발굴대상자 중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발굴대상자 중 20만 명이 여전히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급여 방식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담인력의 절

대적 부족”에서 발생한다는 의견이다.

- 특히 민주연구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정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위기 상황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기 어렵고,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위험가구를 발굴하기 어려운 점도 한계”로 지적했다. 또한 “연계 데이터 역시 질병, 채무, 세대구성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지역 간 재산과 소득 격차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단일 기준을 적용하여 숨겨진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윤 위원은 반복되는 위기가구 발굴 실패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발굴대상자를 중위소득기준 50%까지 확대하고,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급여 제공방식에서 직접 찾아내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접 찾아가서는 발굴방식이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과 같은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그리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위험가구를 발굴하고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공무원이 직접 위기가구 발굴 및 급여신청에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면책 제도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발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공공과 민간을 모두 포함한 관련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숨어있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주당 차원의 개혁입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민생 관련 사회보장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개혁입법을 통해 위기가구가 극단적 선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